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폴란드

Republic of Poland

2023년 5월 9일 | 조사역(G3) 이지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31.3만 km ² 	인구 3,765만 명 (2022 ^e) 	정치체제 이원집정부제 	대외정책 친미, 친EU, 반러시아 
GDP 6,883억 달러 (2022 ^e) 	1인당GDP 18,280달러 (2022 ^e) 	통화단위 Złoty (Zl) 	환율(U\$기준) 4.46 (2022 ^e) 

- 유럽 중동부에 위치한 폴란드는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및 리투아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서유럽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리적 이점과 낮은 제조비용 등을 활용하여 유럽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EU 역내 무역의존도가 높은 점은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인구는 3,765만 명, GDP는 6,883억 달러로 여타 비세그라드 회원국(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은 인구와 비교적 큰 경제규모를 보유하고 있음.
- 2004년 EU 가입 이후 EU 회원국들과의 교역 확대, 꾸준한 외국인투자 유입, 건설 및 인프라 투자 확대, EU 기금으로부터의 지원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해 왔음.
- 2015년 초선, 2020년 재선에 성공한 두다 대통령은 상·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법과 정의당(PiS)의 지지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성소수자 인권 문제 등으로 EU와 대립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89. 11. 1 수교 (북한과는 1948. 10. 16)

주요협정 투자증진보호협정('90), 항공협정('92), 이중과세방지협약('92), 사증면제교환각서('93), 문화협정('94), 과학기술협력협정('94), 운전면허상호인정교환협정('99), 세관협력공조협정('00), 경제협력협정('05), 관광협력협정('05), 사회보장협정('10),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10), 국방협력협정('14), 취업관광프로그램협정('18)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5,639,354	6,595,822	7,858,159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건전지 및 축전지, 자동차 부품
수입	834,172	1,101,692	1,090,734	자동차 부품, 기타금속광물, 산업용 전자기기

해외직접투자 현황(총투자 누계, 2022년 말) 353건, 5,713,670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5.9	4.5	-2.0	6.9	4.9
소비자물가상승률	1.8	2.2	3.4	5.1	14.4
재정수지/GDP	-0.2	-0.7	-6.9	-1.8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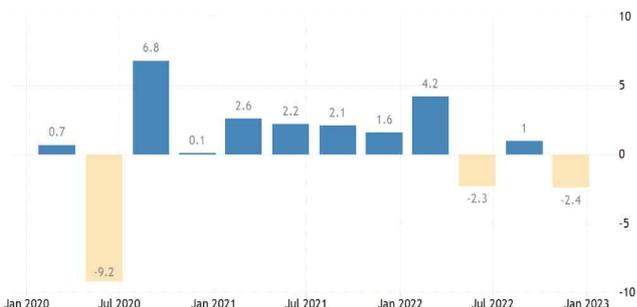
자료: IMF, EIU

2022년 경제는 지정학적 위기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투자활동 둔화

- 2022년 폴란드 경제는 코로나19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까지 소매판매, 산업생산의 회복세가 이어졌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러 수출 감소 및 에너지 비용 증가, 연평균 14.4%에 달하는 높은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등에 의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악조건을 극복하고 4.9%의 양호한 성장을 달성하였음.
- 다만, 인접국의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생산·금융 비용 급증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2022년 고정투자 및 산업 생산량은 하향세를 보임.
- 유럽통계청(Eurostat)은 2022년 4분기 폴란드 경제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2.4% 감소하여 EU 회원국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고 밝힘.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해 2023년 1월 폴란드의 산업 생산량은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산업 신규 수주도 감소세를 보임.
- 2023년에는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한 민간소비의 둔화,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산업활동 축소, 주요 교역국인 EU의 경제침체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1% 미만의 저조한 성장이 전망됨.
- IMF(2023.4월)는 일상생활 회복에 따른 관광업 회복,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등의 상방요인이 존재하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긴축 통화정책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등 부정적 요인으로 EU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함. EU의 경기 침체는 폴란드의 투자 및 수출 규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그림 1] 폴란드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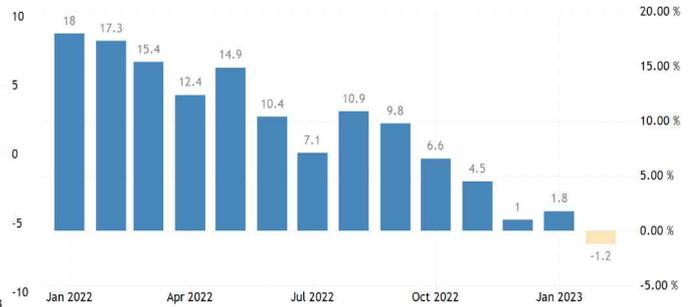
(전분기 대비, 단위: %)



자료: 폴란드 통계청(GUS), Trading Economics

[그림 2] 폴란드 산업 생산량 변동률 추이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자료: 폴란드 통계청(GUS), Trading Econom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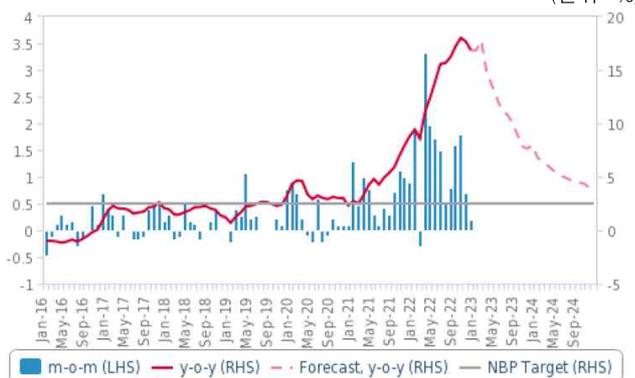
국내경제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분기 이후 점차 하락할 전망

-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14.4%로 폴란드 중앙은행(NBP)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2.5±1%)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EU 회원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임(EU 평균 9.3%). 이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에 따른 유럽 에너지 대란 지속, 국제유가 상승세, 글로벌 공급 차질, 노동공급 부족에 따른 명목임금 인상률 상승, 내수 회복으로 재화 수요 증가 등의 소비자물가 상방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분기에 정점을 찍은 뒤 연말까지 8%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 NBP에 따르면 2022년 10월 연간 물가상승률이 17.9%로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12월 16.6%까지 2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 연료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상승세로, 2023년 3월에는 12.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명목임금이 상승하였으나, 실질임금은 2년 연속 크게 떨어짐. 2023년 폴란드의 법정 최저임금은 상반기 월 3,490즈워티, 하반기 월 3,600즈워티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월 3,010즈워티 대비 19.6% 상승한 것으로 기업의 고용비용 부담 및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NBP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2021년 10월부터 총 11회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0.1% → 6.75%)해왔으며, 2022년 9월 기준금리를 6.75%로 25bp 인상한 후 2023년 4월 현재까지 동결 중임. IHS Markit와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NBP는 2023년 말까지 현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즈워티화가 기대 이상으로 평가절하될 경우 NBP의 추가 조치 가능성도 상존함.
-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인 '반인플레이션 방패(Anti-Inflation Shield)'를 2차례 도입하고 식품·에너지 등에 적용되던 부가가치세를 면제·감면하는 등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노력하였음. 그러나 천연가스, 비료에 대한 면세조치 및 차량용 연료에 대한 부가세 인하가 EU 법령 위반에 해당됨에 따라 2023년부터는 EU 규정 준수를 위해 세제 혜택이 불가능해짐. 이에 정부는 가계용 전기요금 동결 등 대체 조치를 내놓았으나, 정책을 통한 물가안정 효과는 상쇄될 전망이다.
- 폴란드의 경제학자 Levi Nicolas 교수는 인플레이션의 핵심요인으로 급격한 유가 상승 외에도 EU 환경규제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부담금 증가를 지적함. 이는 비료 가격 상승과 농업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져 식료품 물가에 영향을 줌에 따라 기후정책이 초래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그림 3] 폴란드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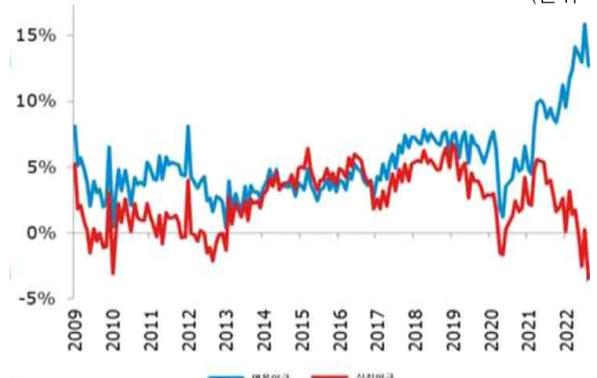
(단위: %)



자료: 폴란드 통계청(GUS), 폴란드 중앙은행(NBP), Fitch Solutions

[그림 4] 폴란드의 명목임금, 실질임금 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폴란드 M Bank, KOTRA

국내경제

조달금리 상승 및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부담 고조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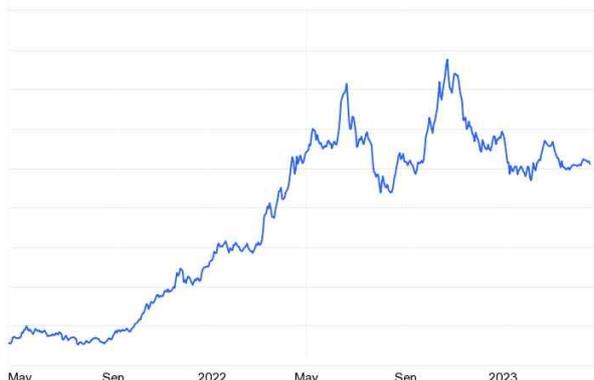
- 2022년 폴란드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3.1%로 전년(-1.8%) 대비 악화되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대응조치로 인한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폴리스 딜(Polish Deal) 프로그램 등 경기부양책,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2023년에는 세금 감면이 축소될 예정이나, 국방비 지출과 11월 총선 대비 선심성 지출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3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전년(-3.1%) 대비 악화된 -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부터 시행된 폴리스 딜(Polish Deal) 프로그램은 세제 개혁을 중심으로 중산층 강화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헬스케어 지출 확대, 청년가구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책으로, 2021년 11월 도입된 '인플레이션 대응조치'와 함께 시행되어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됨. 정부는 2022년 7월 법안 개정을 통해 개인소득세율(PIT)을 17%에서 12%로 추가 감면하는 한편 중산층 세금 감면 조항은 삭제함.
 - * 폴란드 재정지출 규모(억 달러, EU) : ('21.4Q) 871 → ('22.1Q) 659 → ('22.2Q) 723 → ('22.3Q) 693
- 한편, 기준금리 인상 외에도 즈위티화 평가 절하, 인접국 전쟁 및 EU와의 갈등으로 인한 리스크 상승 등으로 폴란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갱신함에 따라 정부의 조달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U에 대한 높은 재정의존도 지속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폴란드는 2014~21년 27개 회원국 앞 EU 총예산지출 누적액 1조 2,788억 유로 중 1,229억 유로(9.6%)를 수령하여 28개 회원국 중 수령액 1위를 차지하였음. 이는 동 기간 폴란드의 재정수입 누계액(1조 8139억 유로) 대비 6.8%에 해당하며, 폴란드의 대 EU 재정의존도가 상당히 높음을 나타냄.
- 폴란드는 EU의 경제회복기금 '넥스트 제너레이션 EU 펀드'(NGEU)를 통해 239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 115억 유로 규모의 대출이 배정되었으며 계획 상으로는 2023년까지 자금 집행 완료 후 2026년까지 각 사업을 이행해야 함. 그러나 EU와 폴란드 간 사법 갈등이 심화에 따라 EU의 폴란드 앞 자금 집행이 동결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중대한 재정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림 5] 폴란드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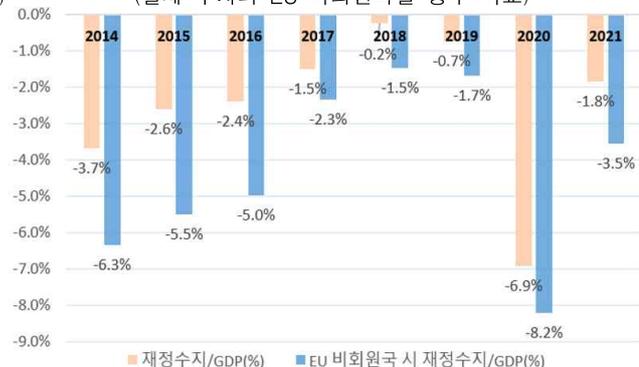
(단위: %)



자료: Bloomberg, Fitch Solutions

[그림 6] 2014~21년 폴란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실제 수치와 EU 비회원국일 경우 비교)



* EU 비회원국일 경우의 재정수지 = (재정수입 - EU 예산 수령액) - (재정지출 - EU 예산 기여액)
자료: EU 집행위원회, Eurostat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상수지	-11,352	-1,445	14,764	-9,562	-20,651
경상수지/GDP	-1.9	-0.3	2.5	-1.4	-3.0
상품수지	-13,240	-4,878	8,111	-8,727	-25,545
상품수출	242,228	246,647	252,355	311,591	336,818
상품수입	255,468	251,525	244,244	320,318	362,363
외환보유액	110,384	115,823	138,513	145,153	146,266
총외채	362,912	355,163	377,462	365,585	349,538
총외채잔액/GDP	61.6	59.6	63.0	53.8	50.8
D.S.R.	27.2	26.9	26.1	22.8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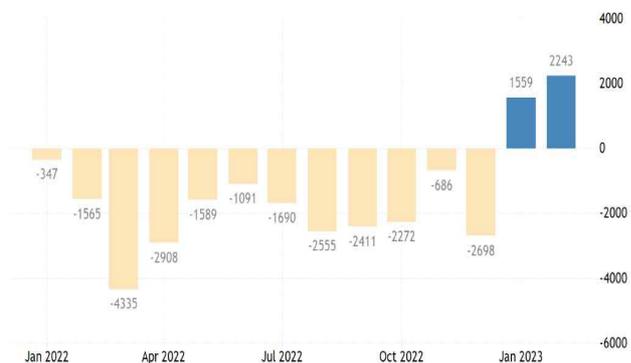
자료: IMF, EIU

상품수출 회복세에도 높은 에너지 수입가격 지속으로 2022년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급증

- 2022년에는 상품수출 증가세와 더불어 운송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서비스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즈위티화 평가 절하, 에너지·식품 가격 등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상품수입액이 증가하였고, 주요 수출국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와 교역량이 급감함에 따라 경상수지가 전년의 2배를 넘는 GDP 대비 -3.2%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한편, 2023년에는 주요 교역국 경제침체에 따른 수출 규모 위축, 높은 수준의 에너지 비용 유지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되나, 환율 안정과 가계 소득 감소에 따른 수입 증가율 하락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전년보다 개선되어 -2%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림 7] 폴란드 월별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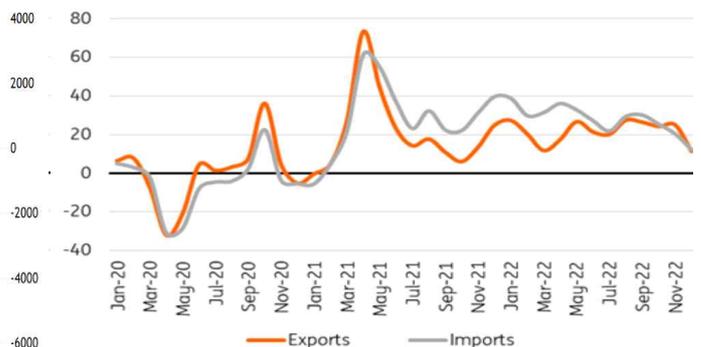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자료: NBP, Trading Economics

[그림 8] 폴란드 월별 수출·수입 변동률 추이

(단위: %)



자료: NBP, ING

대외거래

인접국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심화로 즈위티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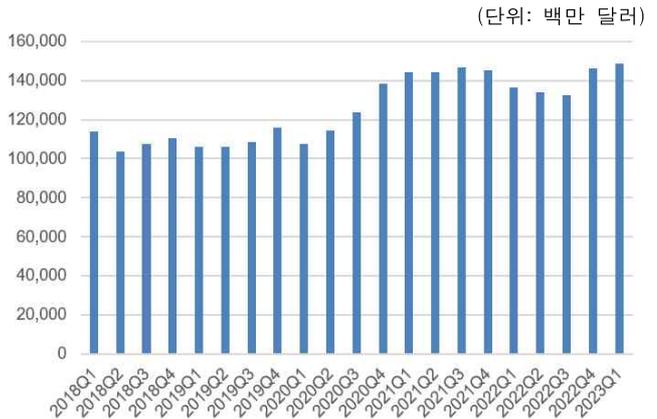
- 2022년 폴란드 즈위티화의 가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 연준의 매파적 정책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직후 유로화 대비 즈위티화 환율은 5.00에 육박하였으며, 2022년 유로화 대비 평균 환율은 4.68로 전년(4.56)대비 2% 상승함.
-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 현상과 더불어 NBP가 금리인상을 중단한 2022년 10월에는 미 달러화 대비 즈위티화 환율도 5.00에 육박함에 따라 1995년 화폐개혁 이후 가장 낮은 화폐가치를 보였으며, 2022년 미 달러화 대비 평균환율은 4.46으로 전년(3.86) 대비 15.5% 상승함.
- NBP가 2022년 10월 이후 금리를 동결한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인 2023년 3월에도 금리를 0.5%p 인상하며 6회 연속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금리 갭이 축소되었으며, 미 연준도 인상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2023년에도 즈위티화 가치는 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2022년 폴란드 외환보유액은 1,463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3.9개월분)로, 즈위티화 약세와 경상수지 적자 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유입 회복, EU의 자금 지원 등을 바탕으로 전년(1,452억 달러)과 비슷하게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그림 9] 폴란드 현물환율 일일 변동률 추이



자료: Bloomberg, Fitch Solutions

[그림 10] 폴란드 외환보유액 추이



자료: IMF IF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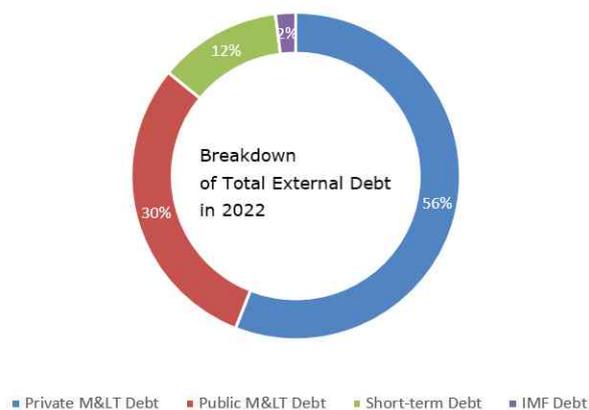
외채상환능력

외채 관련 지표는 전년보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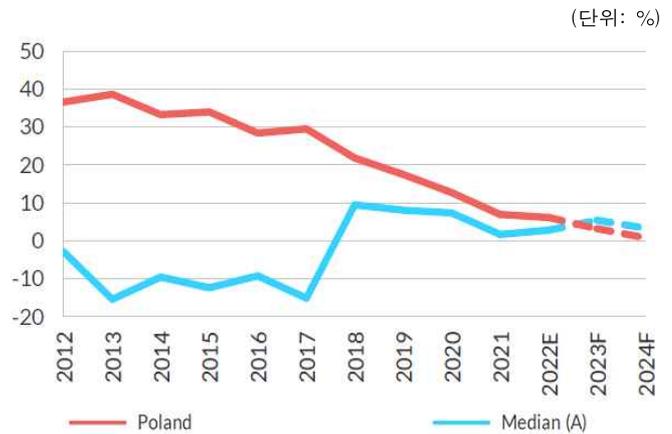
- 2022년 폴란드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50.8%로 경제 회복에 따른 총생산 증가, 총외채잔액 감소 등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D.S.R도 총수출 증가로 전년(22.8%)보다 양호한 20.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 폴란드의 총외채잔액(3,495.4억 달러) 구성은 단기 12.1%(423.8억 달러), 중장기 85.9%(3,002.6억 달러) 및 IMF에 대한 채무 2.0%(6.9억 달러)로 추정되어 안정적인 수준임. 아울러 중장기 외채잔액 중 민간 부문은 65.2%(1,956.3억 달러), 공공 부문은 34.8%(1,046.3억 달러)로 추정됨.
- EIU(2023. 4월)에 따르면, 폴란드의 총외채잔액 규모는 2022년 3,495.4억 달러에서 2027년 3,958.9억 달러로 증가하겠으나,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21년 50.8%에서 2027년 38.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Fitch(2023. 1월)에 따르면 폴란드의 취약한 대외재정 구조는 역사적으로 국가신용도 하방요인으로 작용해왔으나, 최근 수년 간 GDP 대비 순외채잔액¹⁾ 비중이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며 대외재정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동 지표는 Fitch 신용등급이 A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취약한 편이었으나, 2022년을 기점으로 신용등급 A 국가 평균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폴란드 GDP 대비 순외채잔액 비중 추이(% , Fitch) : ('18)21.8 → ('19)17.5 → ('20)12.7 → ('21)6.9 → ('22^e)6.2

[그림 11] 2022년 폴란드 총외채잔액의 요소별 비중



[그림 12] 신용등급 A 국가 및 폴란드 GDP 대비 순외채잔액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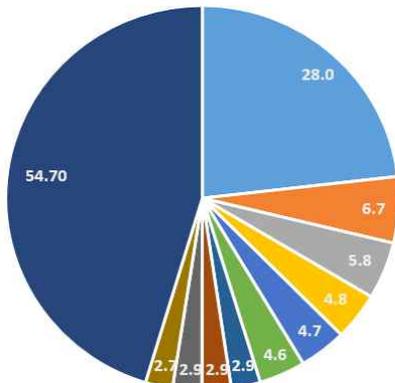
1) 총대외채무잔액 - 총대외채권잔액

구조적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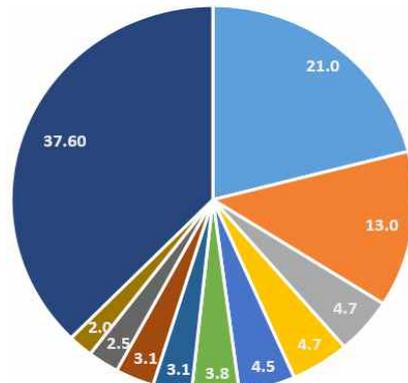
EU 시장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로 EU 경기변동에 민감한 경제구조

- EU에 대한 높은 교역의존도는 오래 전부터 폴란드 경제의 구조적 취약요인으로 지적됨. 영국,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대륙과의 교역이 2022년 폴란드 수출의 89% 및 수입의 64%를 차지하는 등 폴란드의 거시경제 상황 및 경제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따라서 교역상대국 다변화가 국가 경제의 주요 과제로 꼽힘.
- EU 역내에서도 특히 독일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UN Comtrade에 따르면 독일은 2022년 기준 폴란드 수출의 28% 및 수입의 21%를 차지함.
- KOTRA(2023. 1월)에 따르면, 최근 수년 간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2021년 폴란드의 대 아시아 국가 무역은 수출의 경우 전년 대비 한국이 23.9%, 일본이 17.6% 증가하였으며, 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 중국이 33.9%, 한국이 24.1% 증가함.
-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수출에 악영향을 끼쳐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액이 감소하였으나, 국방력 강화에 따른 무기류 수입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함.

[그림 13] 2022년 폴란드 상위 10개 수출국 및 국가별 비중 [그림 14] 2022년 폴란드 상위 10개 수입국 및 국가별 비중 (단위: %)



자료: UN Comtrade, Trading Economics



자료: UN Comtrade, Trading Economics

임금 상승에 따른 중진국 함정 위기

- 폴란드는 서유럽과의 지리적 접근성,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및 생산비용을 우위로 유럽 제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따라잡기 성장²⁾을 지속해 왔으나, 국내 임금 상승 및 노동시장의 초과수요 등으로 저생산성 산업에서의 비용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이 제기됨.
- 폴란드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근로자 우위의 노동시장과 더불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22년 평균임금 상승률은 13%로 최근 14년 동안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임. 이는 고인플레이션 환경에 놓인 인근국 체코(7.9%), 슬로바키아(7.7%)의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치이며, 현재 비세그라드 4국 중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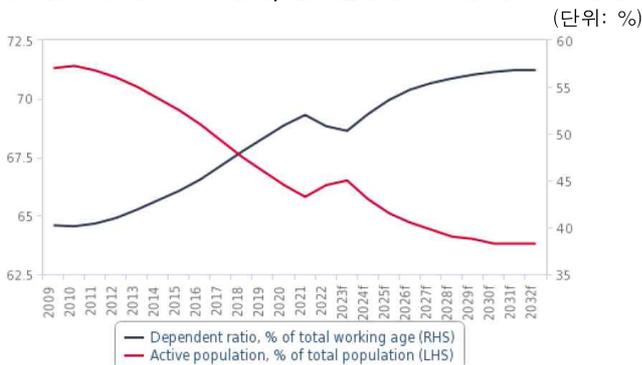
2) 폴란드는 2004년 EU 가입 이후 평균 3.9%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이는 동 기간 EU 평균 성장률 1.5%의 2배를 상회함. EU 가입 후 투자·수출규모 증가에 따른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결과 폴란드의 1인당 GDP는 2004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함.

성장잠재력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가속, 노동시장의 초과수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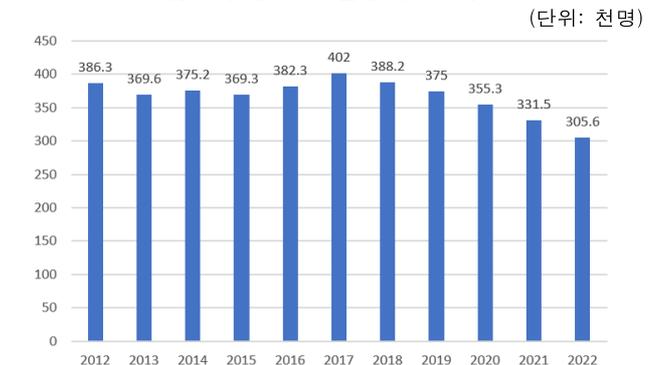
- 폴란드는 2004년 EU 가입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의 성과를 거두는 동시에 인구 감소 및 고령화라는 성장 제약요인에 직면함. 폴란드의 인구는 여타 EU 회원국들로의 대규모 이주, 인구대체율(여성 1인당 2.1명)을 하회하는 출산율(2020년 기준 1.38명) 등으로 1999년 이후 계속 감소 중이며, 이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와 신규 일자리 증가는 노동시장의 초과수요를 심화시키고 있음.
 - UNHCR(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난민이 가장 많이 유입된 국가로, 2023년 4월 기준 유럽으로 이주한 우크라이나 난민 816만 명 중 158만 명이 폴란드에 등록함. 난민 유입을 통해 노동시장의 초과수요가 일부 해소될 수 있으나, 이들의 폴란드 내 취업은 주로 저부가가치 산업에 한정되어 단기적인 완화 효과에 그치고 있음.
 - 2004년 폴란드의 EU 가입 후 총 22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폴란드를 떠나 주로 서유럽 국가들(독일, 영국 등)로 이주하였음. 폴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인구는 3,8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6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약 50만 명 감소함.
 - EU 가입 전 약 20%였던 폴란드의 높은 실업률은 폴란드 현지 산업생산 호황, EU 기금 투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해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함. 그러나 이와 함께 노동의 초과수요가 심화되어 폴란드 자체 노동인구로는 노동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함.
 - 폴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의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21.8%로 10년 전 대비 5% 이상 증가함.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인구구조 고령화가 계속될 경우 부양비*(Dependent Ratio)는 60% 가까이 증가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총인구 대비 65%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사회보장지출 증가, 소득세입 감소 등으로 이어져 정부재정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됨.
- * 생산가능 인구에 대한 유소년 인구나 고령 인구의 합인 백분비
- 정부는 출산 독려를 위해 2016년 2월 'LODZINA 500+' 추진 근거법을 제정하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가족에게 둘째부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500즈워티를 지급하고, 2019년 7월부터는 대상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주력함. 그러나 정책 시행 직후인 2016~17년을 제외하고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22년에는 전후(戰後) 가장 적은 수준인 30.5만 명을 기록함. 일각에서는 낙태금지법으로 인해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함.

[그림 15] 폴란드 부양비, 경제활동인구 비중 추이 및 전망



자료: UN, Fitch Solutions

[그림 16] 폴란드 출생아 수 추이



자료: 폴란드 통계청(GUS)

정책성과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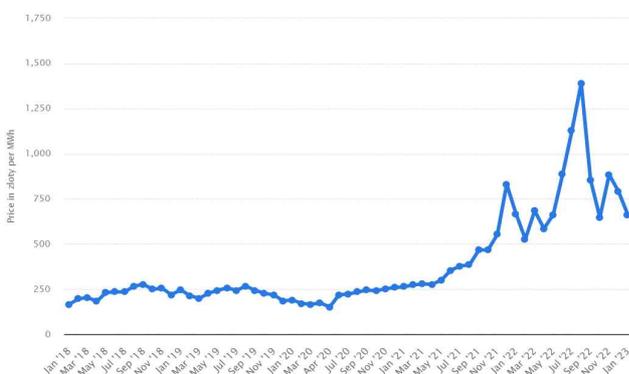
- 폴란드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반인플레이션 방패(Anti-inflation shield)' 정책을 펼쳤으나, 가스에 대한 면세 조치 등의 정책이 EU 법령을 위반함에 따라 2022년 11월부로 에너지 가격 면세 조치를 중단함. 이에 정부는 가계용 전기요금 동결 등의 대체조치를 내놓음.
- EIU(2023.2월)에 따르면, 최근의 조치로 590억 즈워티(134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라고 비판함.
- 폴란드 정부는 2022년 4월 시작된 러시아 석탄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석탄 가격이 급등하자 석탄 구매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에너지 집약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함.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제도에 대한 금융권의 비판

- 폴란드 의회는 단기간에 6% 이상 상승한 기준금리로 인해 대출금리가 높게 책정됨에 따라 늘어난 가계의 채무부담을 보조하기 위해 2022년 7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최대 8개월 간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함.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동 제도 도입으로 시중은행에 최대 42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금리 인상으로 인해 2022년 폴란드 금융 부문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이를 충당할 만한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밝힘.
-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수요 감소는 폴란드 GDP의 약 10%, 고용의 7.6%를 차지하는 건설 산업에 부정적 연쇄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두다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제도와 별도로 2억 9천만 유로의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용인을 지원할 것임을 밝힘.
- 시중은행들은 유예 대상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차용인에만 한정되어야 한다며 동 제도에 반발하였으나 폴란드 정부는 정책을 강행하며 시중은행들이 동 제도를 준수하는지 감시할 것이며, 불필요한 절차 등을 만들 경우 규제기관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라고 은행들을 압박함.

[그림 17] 폴란드의 전기요금 추이

(단위: 즈워티/MWh)



자료: 바르샤바 전력거래소(TGE), Statista

[그림 18] 폴란드 건설 생산량 및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 변동률 추이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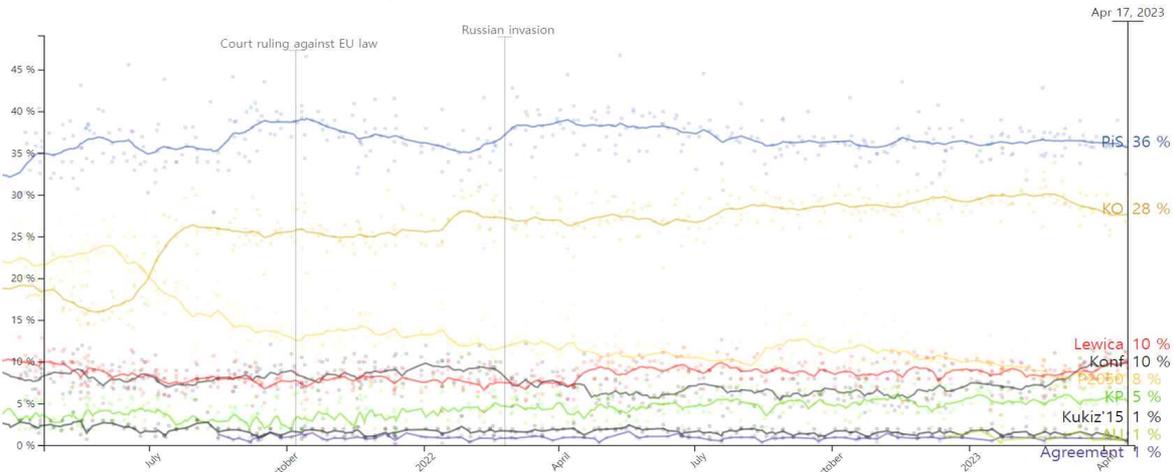
자료: 폴란드 통계청(GUS), Fitch Solutions

정치안정

사법개혁 관련 범여권 통합 우파 내 갈등 지속

- 2019년 총선에서 우파 민족주의 정당인 법과정의당(PiS)은 군소 우파 정당과 함께 43.6%의 투표율로 상·하원 다수석(상원 48/100석, 하원 235/460석)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 대선에서 PiS의 안제이 두다 후보가 시민 연단(KO)의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 후보를 2%p 차로 근소하게 제치고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면서 PiS의 영향력이 더욱 공고해짐. PiS는 2015년 이후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놓친 적이 없으며, 현재까지도 36% 내외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음.
- 비록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의 낙태 위헌 결정과 같은 보수적인 사회 정책과 사법권 침해로 인한 EU와의 갈등에 따른 EU 기금 동결, '폴리시 딜' 프로그램의 실패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위기 등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지지율이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PiS는 제1야당인 시민연단(KO)과 10% 내외의 격차를 유지 중임.
- 한편, 2015년 총선을 계기로 PiS를 주축으로 범여권 통합 우파(United Right)가 결성되어 지난 대선 및 총선 승리를 이끌었으나, 2019년 군소 연대주의 정당인 자유와연대당(WiS)이 대러 정책 관련 갈등으로, 2021년 중도우파 정당인 합의당(Agreement)이 언론법 개정 관련 갈등으로 범여권 통합 우파를 탈퇴하였음. 또한, EU와의 법치주의 갈등이 초래한 회복기금 동결 해제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 법안과 관련한 범여권 간의 의견 분열이 우려됨.
- 통합폴란드당 대표인 즈비그니우 지오브로 법무부 장관은 폴란드식 사법개혁의 주요 입안자 중 한명으로, EU로 인해 동 개혁을 철회할 이유가 없으며, EU와 지속적으로 충돌할 경우 폴란드가 무조건 EU에 잔류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하는 등 유럽 회의주의적(Eurosceptic) 입장을 이어가고 있음.
- EIU(2023.4월)에 따르면, PiS는 2023년 11월 총선에서도 승리를 노리고 있으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 진보 성향의 제1야당인 KO의 지지율이 30%에 육박하고 Lewica(진보), 폴란드2050(중도)과 연합할 경우 야당연합이 약 47%의 지지율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범여권 통합 우파의 지지율을 추격하는 수치로, 정부의 인플레이션 관리와 EU 기금 동결 해제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 PiS의 총선 승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9] 최근 2년 간 폴란드 정당별 지지율 추이



자료: Politico, 2023년 4월 17일 기준

사회안정

여성 및 성소수자 권리 제한, 언론 통제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 격화

- **(낙태 제한)** 가톨릭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폴란드는 유럽에서 낙태를 가장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로,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기형의 태아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는 기존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음. 이후 2021년 9월 임신 22주 차의 30세 임신부가 위험 상황에서 낙태 시술을 하지 못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자 전국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짐.
 - 극우 성향의 PiS는 낙태의 전면 금지까지 계획 중이나, 이를 지지하는 폴란드 국민은 10% 내외로 법안 추진에 사회적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성소수자 없는 구역)** 두다 대통령은 2020년 재선 당시 '동성애 반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음. 정부는 자국 내 '성소수자 없는 구역(LGBT Free Zone)'을 지정하고 성소수자의 입양 금지 정책을 실시하는 등 성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시민단체 및 EU의 반발을 야기함.
 - 이에 EU는 2021년 3월 10일 EU 회원국 27개국 전체를 '성소수자 자유 구역(LGBTIQ Freedom Zone)'으로 선포한 바 있음.
- **(언론 통제)** 2021년 8월 폴란드 하원이 통과시킨 언론법 개정안에 따라 EU 소속 국가가 아닌 국가들은 폴란드에서 방송사를 소유·운영할 수 없게 되었음. 이는 미 Discovery사가 소유한 대형 뉴스 채널 TVN24의 면허 갱신을 저지하여 정부의 대내 언론 통제를 손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우파 연정이 붕괴되는 등 갈등이 격화됨.
 - 국경없는기자회(RSF)의 2022년 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폴란드는 세계 180개국 중 66위로 전년 대비 2계단 하락하였으며, 2015년(18위) 이후 언론의 자유 수준이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2022.12월)는 ESG 요소가 폴란드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라 판단하여 ESG 신용영향점수를 2등급(Neutral-to-Low)으로 평가하였음.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2년 9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2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6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4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2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6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0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모든 영역에 걸쳐 환경위험에 대한 노출이 높지 않으나, 에너지 공급 중 석탄의 높은 비중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탄소전환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노동참여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경제·재정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함. 또한, 지역 및 도농 간 고용·소득 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및 정치적 긴장이 우려되어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사법부 독립 침해 관련 이슈가 있으나, EU 가입 후 제도적 질이 개선됨에 따라 종합적으로 견고한 제도적 틀이 구축된 것으로 보임. 재정준칙을 기반으로 한 높은 재정정책 효율성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신뢰성·독립성을 고려하여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은 '긍정적(1등급)'으로 평가됨.

국제관계

반(反)법치주의 행보에 따른 EU와의 관계 악화로 EU 기금 지급 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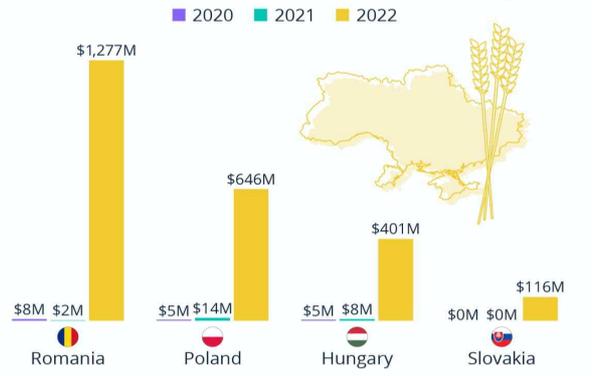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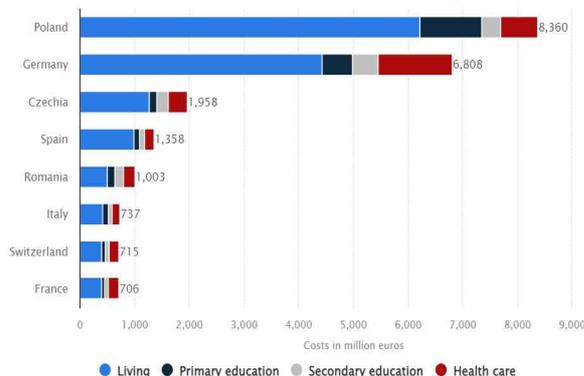
- EU는 사법부 독립, 성소수자 인권, 난민 등의 이슈를 둘러싸고 폴란드 정부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 왔으며, 2021년 자국 헌법이 EU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음을 인정한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갈등이 고조됨.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의 사법개혁이 EU의 핵심가치인 법치주의를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EU법 위반을 근거로 폴란드를 수차례 제소하여 승소하였으나, 정부의 반법치주의 행보가 지속되자 2023년 2월에 폴란드를 재차 제소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 2015년 출범한 두다 행정부와 PiS는 사법개혁을 빙자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침해해 왔음. 구체적으로는 법관의 정년 단축, 정년 도달 법관의 임기 연장 관련 법무장관 앞 재량권 부여, 하원 앞 법관인선위원회 위원 지명권 부여, 법관징계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통해 사법부를 정권에 예속시키고자 했음.
-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EU법 우위의 원칙을 내세운 ECJ의 판결에 반발하여 폴란드 헌법재판소 앞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21년 10월 7일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ECJ의 조치가 위헌이며, 폴란드 헌법이 EU법에 우선한다고 판시함.
- 사법부와 관련해 수년째 이어진 폴란드 정부와 EU의 갈등으로 유럽집행위원회(EC)는 폴란드 정부에 벌금을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360억 유로(한화 약 49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기금 지급을 보류함. 폴란드는 대표적인 EU 기금 수혜국으로, 대통령과 총리는 EU 기금 동결 해제를 모색하고 있으나 각기 다른 해결책을 주장 중임.
- 2023년 1월, 폴란드 상·하원은 기금 동결을 해제하기 위해 기존 판사 징계제도를 개선하는 사법제도 개혁안을 승인했으나, 두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폴란드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기 전까지 발효되지 않을 것을 공표함. 더욱이 EU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여전히 ECJ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EU 기금 동결 해제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개정안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가 대법원에서 별도의 기관으로 이관될 것이며, 정부 조치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판사들을 직접 징계하지 않도록 변경될 것으로 알려짐.
-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EU 기금이 친환경 에너지 개발, 국가 인프라 개발과 같은 공공 투자에 필요하며, 특히 최근 국방비 증액에 따라 그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야당 의원들의 개정안 지지를 촉구함. 반면 두다 대통령은 기금 동결을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이는 폴란드의 헌법과 주권을 지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혁안 승인을 보류함.

국제관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인도적 지원이 지속되나, 곡물 수입금지 조치 관련 EU와 갈등 발생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게시 이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300대 이상의 탱크, 전투기, 자주포 등을 지원하여 NATO 회원국 중 미국, 영국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 국가가 되었음. 아울러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로 약 15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입되어, Statista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에 총 83.6억 유로를 지출하여 가장 많은 비용을 지원한 국가가 되었음.
- 폴란드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자본으로 운영되는 기업은 2만 4천 여개로 폴란드 내 외국계 기업의 25%를 차지하며, 이 중 1만 개의 기업이 2022년 1~9월에 설립됨에 따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기업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과잉 유입으로 인한 곡물 가격 하락으로 자국 농업이 피해를 입자 2023년 4월 우크라이나산 곡물 및 식품의 수입 중단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인접국들도 이에 동조함.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세 재부과 및 곡물 유입 제한을 EU에 호소하였으나, EU는 2024년 6월까지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무관세 수입을 연장기로 결정함.
- EU는 전쟁으로 인한 흑해 항구 봉쇄로 곡물 수출이 불가능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무관세·무제한 수입을 허용함. 이에 따라 인접국으로의 육로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 병목현상으로 해당 곡물이 재수출되지 않고, 경기 침체로 인한 곡물 수요 감소에 따라 공급 과잉이 발생하여 곡물 가격이 하락함.
- 2023년 3월 EU는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피해 농민 지원을 위해 5,630만 유로 상당의 지원 조치를 승인하였으나, 농민들은 피해 규모 대비 EU 지원책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함. EU는 수입 중단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동유럽 5개국에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예외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안하였으며, 피해 농민 지원을 위해 약 1억 유로 규모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제안함.
-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EU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세계식량계획(WFP)과 EU의 협력이 필요하며,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힘. 더불어 정부가 직접 곡물 구매에 나서 가격 하한선을 유지하고,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표명함.

[그림 20] 유럽 국가의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유형 및 비용 [그림 21] 우크라이나의 중·동부 유럽 국가 앞 곡물 수출액* (단위: 백만 유로) (단위: 유로)



자료: Statista. 2022년 10월 기준

*해당국을 통한 육로 운송분 포함
자료: UN Comtrade, Statista

외채상환태도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폴란드는 공산권 붕괴 후인 1991년 파리 클럽에서 당시 외채규모의 50%를 탕감받고 채무상환 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하는 채무재조정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까지 해당 채무를 조기상환하여 현재 파리 클럽 채무 잔액은 없음.
- 한편, 1994년 대기성차관(SBA) 지원 이후로 IMF의 자금을 인출한 적이 없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하며, IMF와 2009~17년 신축적 신용공여(Flexible Credit Line, FCL) 한도를 설정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제고하였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Moody's	A2 (2022.04)	A2 (2021.04)
Fitch	A- (2023.01)	A- (2022.07)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는 기존 등급 유지, 인접국 전쟁 및 EU와의 갈등을 위험요인으로 평가

- 2020년 이후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는 코로나19 대응과 산업다각화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폴란드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EU와의 갈등을 위험요인으로 지적하였음.
- Fitch(2023. 1월)는 에너지 공급원 다각화, 주변국 대비 낮은 공공부채, 전쟁에 의한 충격에도 우수한 경제회복력 등을 고려하여 폴란드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Stable)로 유지하였으나, EU와의 갈등 심화에 따른 기금 수령 지연 가능성, 대선을 앞둔 여당의 확장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 증가 가능성 등이 국가신용도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힘.
- Moody's(2022. 4월)는 견조한 거시경제적 틀 구축, 양호한 외채상환능력 등을 바탕으로 폴란드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2(Stable)로 유지하였으나, 인접국의 분쟁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 사법체계 혼란, EU와의 갈등 지속 등이 국가신용도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힘.

- 2022년 폴란드 경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러 수출 감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투자 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소비·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4.9%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음. 2023년에는 장기화된 전쟁 및 인플레이션의 영향, 주요 교역국인 EU의 경기침체로 인해 1% 미만의 저조한 성장이 전망됨.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반인플레이션 방패(Anti-inflation shield)' 정책 등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3.1%를 기록하여 전년(-1.8%) 대비 악화되었으며, 경상수지는 수입물가 상승, 전쟁으로 인한 주요 수출국(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교역량 급감으로 GDP 대비 -3.0%의 적자를 기록함.
- 법과정의당(PiS)과 두다 행정부는 자국 내 시민단체, 언론 및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여성 및 성소수자 권리 제한, 언론 통제 등 반(反)법치주의 행보를 이어나가며 정치·사회·외교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특히 사법부 독립성 침해 문제로 재정 및 교역의존도가 높은 EU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나, 관련 법안 개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는 등 기금 동결 해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